

정개·사개특위 이번주 종료... 여야 '전운'

與 '선거법 표결처리' 압박에 한국당 강력 반발

사개특위, 조국 청문정국에 법안 심사도 못하고 공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임박하면서 두 특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상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활동 시한까지 불과 몇새를 남겨 놓고 있지만, 두 특위의 선거제 개혁 및 사법 개혁 법안 처리는 시계제로 그 자체다. 정개특위는 '8월 내 표결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고, 사개특위는 정개특위 상황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맞물려 사실상 공전 상태다.

오는 26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둔 정개특위에서는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표결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성어 접혀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상태다.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8월 안에 정개특위의 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과반의 동의에 따라 의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법안을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이자 폭거"(장제원 의원)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법안을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하

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한국당 요구만으로도 안전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다만 안전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뜻을 함께하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를 충족해 이 절차 또한 무력화될 수 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를 한 달 연장하고 각각 원내대표가 별도 논의를 하는 '투 트랙' 협상을 제안했으나 정의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경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역시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활동 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교체됐지만, 아직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확정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에 다다랐다.

검경개혁소위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

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논의하는 만큼 사개특위의 핵심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당은 이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맞서면서 시간만 계속 흘려갔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극에 달하면서 사개특위는 제대로 된 안전 논의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특히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만큼 여야는 사개특위에서의 법안 심사보다는 일단 조 후보자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개특위와는 달리 사개특위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할 운신의 폭이 좁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앞서 사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접점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당 소속인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민정 이광철 靑 비서관 5명 교체...자치발전 유대영·사회정책 정동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1부속 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신입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 비서관을 포함해 총 5명의 신입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부비서관에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유대영 정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민정비서관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신지연(52) 제1부속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해외 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으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1부속비서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를 떠나는 민행배 전 사회정책비서관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지역, 조한기 전 1부속비서관은 충남 서산·태안 지역에 각각 도전한다.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은 서울 성북갑, 복기왕 전 정부비서관은 충남 아산갑,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은 서울 은평을 출마를 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당 '보수통합' 탐색

연찬회 특강에 '안철수 측근' 초청...나경원 직접 부탁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을 위한 탐색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에 공개 러브콜을 보낸 데 이어 안 전 의원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 당 연찬회 특강 강사로 초청하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나경원 의원은 "보수 빅텐트"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당 일각의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오는 27~28일 경기 용인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연찬회에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發) 정책개편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연찬회 특강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김 교수에게 연락해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현안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을 듣겠다는 게 표면적 목적이지만, 굳이 김 교수를 부른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를 향한 '손짓'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계 인사들은 김 교수의 행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호남권역(광주, 전남, 전북) 광역의회는 지난 23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호남권 3개 시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를" 박광온 "日과 기술격차 1.9년으로 줄어"

호남권 광역의회 촉구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광역의회는 지난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결의대회에는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호남권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서 특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경기 수원시정)은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1.9년으로 줄여놓았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일본 경제전쟁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핵심분야인 IT산업 등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우리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단대하고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의 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바른미래, 하태경 징계 이번주 윤곽

최고위원 정치·박탈 시 당권파 vs 비당권파 4대 4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안병원 당 윤리위원장은 25일 "가능하면 8월 안에 윤리위 회의를 열기로 정했다"며 "하태경 의원은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라 가장 먼저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당 윤리위가 이번 주에 회의를 개최해 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면 하 최고위원은 최고

위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당무 집행 최고 책임기관인 최고위원회 의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힘의 균형'이 달라짐을 뜻한다.

현재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구도는 '4대5'지만, 비당권파인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로 최고위원 역할을 못하게 되면 '4대4'로 바뀐다. 이 경우 최고위의 무게중심은 당권파로 이동한다. 안전의결과 관련해 '기부동수의 경우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당헌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바른정당계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좋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 곡성군 삼기면 경각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원룸)** ▶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